

특/별/대/담

천 갈래의 길, 하나의 목표: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이 말하는 연구와 정책, 평화공존의 길

KDI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은 취임 한 달을 맞은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을 초청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대담은 통일연구원의 운영 철학과 연구 방향,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일연구원의 강점을 극대화할 방안, 연구방법론의 변화와 연구윤리,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담은 조동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대담자의 동의를 얻어 주요 내용을 정리·수록한다.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31일(금), 14:00~16:00, 통일연구원 원장실

사회

조동호(KDI)

대담

권만학(통일연구원 원장)



조동호: 오늘 이 자리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권만학 통일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변화한 한반도 현실 속에서 통일연구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통일 연구와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는 과거와는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체제 생존과 국가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한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기존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북러관계의 밀착과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한층 복잡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주요 기조로 제시하고 있는 지금, 변화한 현실을 어떠한 언어와 틀로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북한과 한반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뢰할 만한 지식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답에서는 먼저 원장님의 기관 운영 철학과 통일연구원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 이어 북한 연구의 객관성과 연구방법론의 변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를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변화와 북중·북러 관계, 남북 간 대화와 인도적 협력의 가능성, 통일과 평화의 관계, 그리고 통일연구원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까지 폭넓게 말씀을 들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통일연구원이 투득차관(透得此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평화공존의 한반도가 건곤독보(乾坤獨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구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으며, 취임사에서 이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만학: 이 구절은 원래 대도무문(大道無門)·천차유로(千差有路)·투득차관(透得此關)·건곤독보(乾坤獨步), 이렇게 네 구절로 이어집니다. 송나라 선승 무문혜개(無門慧開)의 화두집 『무문관(無門關)』에 나오는 말이지요.

먼저 대도무문은 큰 진리에 이르는 데 정해진 문이 없다는 뜻이고, 천차유로는 그곳에 이르는 길은 천 갈래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연구기관의 운영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목표와 질문은 분명히 제시하되,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방법까지 일일이 지시하면, 연구자의 창의성이 위축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가 아니라 원장 등 지시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나 외부에서 연구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기보다 질문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투득차관은 그 관문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뜻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원장으로 부임해 보니 통일연구원이 처한 여건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이 관문을 넘어서면 천하를 당당히 걸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곤독보에는 통일연구원이 대북정책과 북한·한반도 연구 분야에서 누구도 쉽게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정해진 문이 없기에, 연구의 길은 더 넓게 열립니다.”

조동호: 한자만으로 뜻을 보았을 때보다 설명을 들으니 원장직을 맡으신 무게감과 통일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통일연구원을 어떤 연구기관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원장님의 운영 철학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권만학: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학술적 기여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가 북한과 한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과학이 발전해 왔듯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북한과

한반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한반도·통일 연구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내고, 그 연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북한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최근에는 ‘북향민’이라고도 부르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편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여 정확한 지식과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둘째는 정책적 기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가 통일연구원의 정책안을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평가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 기여가 연구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기관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동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뢰받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권만학: 그렇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 ‘독보적인 연구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는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현실에 적실한 정책안을 제시하는 기관, 다시 말해 학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동호: 최근 정치·외교와 경제,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치가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다양한 연구 분야를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 구별되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이러한 강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극대화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만학: 학문에는 정치학·경제학과 같은 분과 학문이 있고, 한편에는 특정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지역학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독특함은 이 두 접근이 교직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분과 학문이 정교한 분석을 담당하고, 지역학적 시각이 북한과 한반도라는 실체를 총체적으로 조망해야 합니다. 두 접근이 결합되어야 북한과 한반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가능합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첫걸음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념이나 선입견의 영향을 받으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북한 연구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어려움뿐 아니라 연구자가 자신도 모르게 이념적 선입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경계하면서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칸막이를 낮출수록, 한반도는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조동호: 통일연구원의 분야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오히려 부서 간 ‘칸막이’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제적 연구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권만학: 통일연구원은 최근 한동안 없어졌던 국제전략연구실을 복원했습니다. 이 연구실은 오랫동안 운영되다가 약 2년 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체되었는데, 다시 전통적인 4개 연구실 체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통일정책연구실·북한연구실·인권연구실과 함께 북한의 대외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러관계가 진전되고 북중관계도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관계를 다루는 연구실이 없는 것은 분명한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에서 언급한 ‘부서 간 단절’은 각 연구실 내부의 소통과 협력에 비해 연구실 사이의 횡적 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뜻했습니다. 취임 이후 조직과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이러한 우려가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원장을 중심으로 횡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동호: 오랫동안 북한·통일 연구를 해오신 입장에서, 북한·통일 분야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나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만학: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치중립성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둘러싼 이념이 당파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연구자들 역시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편견에 내몰렸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내재적 접근’을 이야기했지만, 그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을 실제로 얼마나 깊이 헤아렸는지는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을 다소 낭만적으로 바라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연구와 정책 사이의 괴리입니다. 정책 담당자에게 현실보다 정권의 이념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대북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실 인식이 정확히 공유되었다면 정책이 그렇게까지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북정책과 통일 문제는 국민 여론에 미치는 파장이 큰 반면, 많은 국민이 쟁점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경험과 직관, 감정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 연구는 친북이다” 또는 “반북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부는 정확한 질문을 하고, 연구기관은 객관적인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동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실 생각입니까.

권만학: 통일연구원은 북한·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이 모인 조직인 만큼 각 연구자가 축적해 온 연구 성과와 학문적 독립성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정책적 기여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학문적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고, 학문적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연구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두 가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마다 정책적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판단 기준은 정권의 지향이 아니라 현실과 근거여야 합니다. 정부가 결론을 미리 정해 요구해서는 안 되며, 연구기관이 제시한 정책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기관 역시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조동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교류협력의 단절과 정보 획득 기회의 축소로 북한 연구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북한·통일 분야 연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의 축소로 ‘세대교체’도 순조롭지 않아 북한·통일 분야 연구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권만학: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원활하고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연구 생태계도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남북 간 관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 가까워진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큼니다. 다만, 연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대응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관련 연구와 국민 여론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무관심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개의 별도 국가로 재규정하려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이 남쪽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지 않게 될 때까지 접촉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 교류와 연구 환경의 조기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그동안 북한·통일 분야 신진학자 포럼 등을 운영하며 연구 생태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동호: 통일연구원과 KDI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에는 어떤 협력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권만학: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의 간사기관으로서 기획협동연구와 주요 학술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회 소관 기관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 연구기관에서 북한·통일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의 협의체인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두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호: AI, 위성영상,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석 기법이 북한 연구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통일 연구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보십니까.

권만학: 북한·통일 문제 연구의 고질적인 어려움은 정보와 자료의 부족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산재한 방대한 데이터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인간의 힘만으로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분석과 연구문헌의 검색·요약은 연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투입된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지고, 사실과 다른 답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는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적고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도 큼니다. 위성영상 역시 활용에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통일연구원은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위성영상과 같은 고가 자료의 확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동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AI를 사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권만학: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투입하는 자료와 질문입니다. 통일연구원이 다루는 사안은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미래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 유출과 보안,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국내법적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가 구축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과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AI가 지식 생산과 연구 방식에 깊이 들어오는 흐름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조동호: 새로운 방법론이 발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방법론에만 의존하면, 현실을 잘못 읽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만학: 충분히 가능한 우려입니다.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데이터 분석만 앞설 경우 연구 결과의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국 북한을 깊이 이해하는 연구자와 AI·위성영상·텍스트마이닝 등 새로운 방법론을 다루는 연구자가 협업해야 합니다.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시대에 한 사람이 전문 영역과 새로운 기술을 모두 깊이 익히기는 어렵습니다. 두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은 생존전략을 바꾸었고, ‘두 국가’는 관계의 문법을 바꾸었습니다.”

조동호: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이 지향하는 연구와 조직 운영의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통일연구원이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로 논의를 옮겨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서 현재의 남북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보셨는데요, 이러한 판단의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만학: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해방 이후 남북관계가 거쳐 온 변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이후 남북은 민족적 정통성과 체제의 우위를 둘러싸고 경쟁했고, 이는 냉전적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탈냉전으로 이행하고 남북 간 정치·경제적 체제 경쟁의 우열도 사실상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1990년 독일 통일이 겹치면서 북한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본격적인 생존 전략에 들어갔고, 그 핵심에 핵 개발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북한의 핵 개발을 거래용이나 협상용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북한의 전략은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 없이는 체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유화정책을 사용하고 남북 교류와 비핵화 협상에 응했지만, 핵 개발 자체를 포기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같은 ‘통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통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무력통일, 예멘의 합의 이후 실패, 독일의 합의통일 사례에서 보듯 통일의 형태와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김일성 주석이 1991년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이지 않는 통일을 하자”라고 말한 것 자체가 당시 북한이 느끼던 생존의 위기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보여 줍니다.

최근 3~4년의 흐름은 통일 담론의 또 다른 중대한 전환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운용체계를 갖춘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생존 전략의 잠정적 완성을 뜻하며, 2023년 말부터 제기한 ‘두 국가’ 노선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평화공존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가 추진해 온 비핵화 노력은 결국 북한의 의도와 인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무지’였고, ‘덧없는 희망’에 불과했던 걸까요.

권만학: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북한을 이해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녀 온 편견과 선입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느꼈던 체제 생존의 절박함과 벼랑 끝의 위기의식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주로 안보 불안의 산물로 보고,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과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북한의 경제난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북한 정권이 느끼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북한 정권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의 문제에는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핵을 포기한 이후 북한이 마주하게 될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와 대한민국의 국방비 및 재래식 전력 사이의 격차를 고려하면, 북한은 핵무기 없이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결국 우리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적 보상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해 접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동호: 결국 우리가 북한의 의도와 위기의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애초부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권만학: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그렇지 못한 쪽이 느끼는 절박함을 충분히 헤아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협상용으로 보았던 초기의 판단부터 이후 우리가 제시한 여러 대안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체제 생존과 안보를 둘러싸고 느꼈던 절박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국가를 지우는 일보다, 그 사이의 적대를 지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조동호: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일시적인 전술로 보십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체제 전략으로 보십니까.

권만학: 저는 이를 남한을 압박하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 전술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체제 전략의 성격이 강합니다.

저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는 ‘통일을 폐기한 두 외국론’입니다. 벌어진 격차 속에서 북한은 더 이상 통일 담론을 유지할 능력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통일에

이르기 어렵고, 핵무력이 완성된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명분을 유지할 필요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국가론’보다 ‘두 외국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북한이 남과 북을 완전히 별개의 나라와 민족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에 서로가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심고, 남한을 같은 민족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노선을 남한을 향한 핵무기 사용의 명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북한이 독일 통일의 충격과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지에 주목합니다. 동독은 ‘일민족 일국가’에서 1968년 개헌을 통해 ‘일민족 이국가’로, 1974년 개헌을 통해 ‘이민족 이국가’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노선도 이러한 정체성 분리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외국론’은 단기 정책이라기보다 북한 주민들이 남쪽 주민을 다른 국민과 민족으로 인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 통일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통일 지향’을 반복적으로 앞세우기보다 ‘통일 지양(止揚)’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헤겔의 아우프헤벤(Aufheben)에서 온 표현으로, 통일 담론의 대결주의적 요소는 버리고 화해와 상호 편익을 증진하는 요소는 살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말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통일을 반복해서 말하면 대결을 심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가능성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는 유엔헌장이 제시한 주권의 상호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 아래에서 북한의 실체와 정체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매우 어렵고 민감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대화와 평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두 국가론의 핵심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대화와 평화의 상대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이지요. 반면, ‘적대적’이라는 것은 관계와 정책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헌법에서 두 국가의 성격을 제도화하면서도 ‘적대적인 국가’라는 표현까지 정체성으로 고정하지 않은 것은, 적대성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임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말씀하신 ‘두 외국론’이 단기적인 전술이 아니라 북한의 중장기적인 체제 전략이라면, 이를 최근 김정은 체제의 국가운영 방향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9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과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만학: 저는 제9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를 ‘국가역량을 복원하고 새로운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평가합니다. 핵심은 점진적 발전, 대외관계의 전략적 확장, 국방력 강화, 국가 운영체계의 제도화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생산기반과 국가의 관리역량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시장의 성장으로 주민들의 생존 기반은 일정 부분 회복되었지만, 국가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은 충분히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정책은 국가의 기초체력을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방공업 육성, 생산설비 현대화, 에너지와 물류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경제의 토대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려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 중국과의 경제협력 회복, 관광과 무역 재개를 통해 외부 자원을 내부 발전에 활용하려 합니다. 군사력은 안보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치 측면에서는 내각의 경제관리 기능과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시장활동도 국가의 관리체계 안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다만,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점진적 발전은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지역 간 격차도 장기적인 제약 요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경우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고, 국가의 관리 기능과 시장의 자율성·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성과는 정책의 수가 아니라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진영은 단단해 보여도, 이해관계에는 늘 틈이 있습니다.”

조동호: 결국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은 내부의 정책과 역량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대외 환경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중·북러 관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권만학: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입니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북제재에 일정 부분 협조했지만,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밀착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이른바 ‘신냉전 외교’를 강화했고, 우크라이

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전후에도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러 밀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반이 취약한 러시아만으로는 북한의 경제적 필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이완되었던 북중관계도 다시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중러 관계를 하나의 견고한 진영으로만 보기보다는 전략적 협력과 개별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함께 존재하는 구조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만으로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발전 정책과 살림집 건설이 추진되더라도 전력·교통·물류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제 제재에 따른 금융·무역·기술 접근의 제약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결국 대외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대중·대러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대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북중·북러 관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외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권만학: 우선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북한의 체제 안전 문제는 북미관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 개발 중단을 입구로 하는 단계적 해법, 즉 비핵화 현실론을 모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미국은 피스메이커’라는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북미관계의 진전만으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인도적·기능적 협력을 병행하여 북미관계의 진전을 한반도 평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한반도의 안정과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우리의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편승 논리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고, 국익에 기반한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와 제재 환경을 고려하면, 한러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와 러시아의 경제 복구, 극동·시베리아 개발 수요를 염두에 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북방정책이 만나는 접점을 찾는다면, 한국의 산업 역량과 러시아의 자원,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 공간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북중·북러 밀착이라는 단기적인 현상에만 매몰되기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한중관계와 향후 한러관계까지 함께 조망하는 중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익을 지켜 나가는 전략적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평화는 거대한 선언보다, 충돌을 막는 작은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조동호: 지금까지 북한의 두 국가 노선과 최근의 국가전략,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외 환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서 ‘적대적’을 ‘평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만학: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주권의 상호 인정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남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는 새로운 원칙이라기보다 유엔헌장이 국가 사이의 적대성을 줄이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무력과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도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 간 연락채널과 군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하고, 접경지역과 해상에서 충돌을 예방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성과 검증 가능성을 전제로 위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군비통제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무력의 상호 감축’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양보나 무장해제를 요구해서는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남북이 동시에 위협을 줄여 나가고 군사적 신뢰를 축적해야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군비통제 논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화는 처음부터 통일방안이나 체제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남북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 이산가족 문제, 감염병·재난 대응, 기후·환경, 수자원 관리 등은 정치·군사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의제입니다. 작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그 성과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로 넓혀 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상대를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대화와 평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교류를 통해 심리적 거리를 좁혀 가는 기능주의적 접근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영구 분단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남북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권과 체제를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관계를 먼저 만드는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평화를 제도화하고 신뢰를 축적해야 화해와 협력의 공간이 넓어지고, 장기적인 통합의 가능성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늘구멍은 작지만, 막힌 관계에 들어오는 첫 빛입니다.”

조동호: 말씀하신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실제 출발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 단계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권만학: 남북 당국 간 공식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 2018년이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1년 군 통신선 등 연락채널이 복원되기도 했지만 2023년 4월부터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남북협력 전반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현실적인 필요와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되, 큰 사업보다 작은 사업에서 출발하고 조급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 분야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과 병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은 건설하더라도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적절한 시점에 협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 당국과의 양자협력에 응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협조를 얻거나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바늘구멍’이 열린다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교류협력 재개를 우선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판문점 연락채널과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협의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학술교류·스포츠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접점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늘구멍 전략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상대의 공식 호칭과 실체를 인정하는 문제와 같은 근본적 과제도 함께 풀어 가는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제한적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조동호: 보건의료와 같은 협력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나 NGO들의 대북 지원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권만학: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군사적 목적과 연계한다면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네 가지 원칙인 인류애·공평성·중립성·독립성 가운데 중립성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논쟁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5월 제주도가 신장투석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비닐하우스 자재, 한라봉 묘목 등 물품을 지원했을 때 북한은 조선장애자후원회사를 창구로 내세웠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도 필요한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협력 가능성을 열어 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정 기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기구를 창구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남북 당국 간 직접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과 지자체·NGO를 통한 지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진다면 북한이 우리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독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이어졌고, 그 성과는 콜 정부가 이어받았습니다. 정책이 정권을 넘어 지속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대북정책에서 정권별 이념만 앞세우기보다 사전에 협의하고 타협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동호: 앞서 평화공존을 먼저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통일 담론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까요. 평화를 통일보다 앞세우는 것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만학: 통일과 평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진보 진영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반면, 보수 진영은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통일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남북 간 국력 격차의 확대를 거치면서 통일이 사실상 흡수통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오히려 보수가 통일을 강조하고 진보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입장이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뿐 아니라 이념적 지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국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반복해서 강조하면, 북한은 이를 흡수통일이나 체제 붕괴의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로서 북한과 민족적 정통성을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해야 한다는 방식의 통일론을 앞세울수록 통일 담론은 통합의 언어라기보다 대결의 언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평화를 먼저 제도화해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와 체제를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통일을 포기하거나 영구 분단을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축적해야 화해와 협력의 공간이 넓어지고, 장기적인 통합의 가능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화통일’이지 ‘통일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먼저 구축되어야 그 위에서 통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통일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두되, 지금 가능한 평화와 협력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장기적 가능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인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동호: 그렇다면 통일교육도 통일을 강조하기보다는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는 평화교육의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권만학: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통일을 당장의 의무나 과제로 강조하면, 오히려 통일 문제에 대한 거리감과 거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남북이 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는지, 평화가 주민들의 안전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통일을 완전히 잊자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공존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되 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장기적인 가능성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통일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는 것과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평화 속에서 다음 세대가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선택의 공간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호: 지금까지 변화한 한반도 정세와 평화공존의 과제를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통일연구원의 운영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통일연구원을 학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취임사에서 통일연구원의 처우 문제가 구성원의 자긍심과 우수 인재의 유입·유지, 연구 역량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좋은 연구가 조직을 세우고, 좋은 조직이 더 나은 연구를 부릅니다.”

권만학: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합니다. 통일연구원의 치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관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기보다는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외부 여건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우선 좋은 연구 성과와 정책적 기여를 통해 기관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구원 구성원들과 함께 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조동호: 결국 우수한 연구 성과가 기관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그것이 다시 구성원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임기를 마친 뒤 ‘권만학 원장 재임 동안 통일연구원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권만학: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가 실제 평가로 남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통일연구원은 북한·한반도 연구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며, 이곳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한반도가 비로소 이해된다”라는 평가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다녔던 텍사스대학교 본관에는 “여기에서 진실을 배우라. 그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취지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쉬운 북한·한반도 연구 분야에서 그와 같은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둘째는 정책적 기여에 대한 평가입니다. 통일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대안이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연구원을 이끌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영’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연구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화(人和)’입니다. 조직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안전망과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자성(自省)’입니다. 연구원과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지 않으면 과거의 관성과 익숙한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연구원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구성원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연구원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조동호: 지금까지 말씀하신 객관성과 자성의 원칙은 연구기관뿐 아니라 개별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의 대선배로서 후학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연구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연구자는 답을 사랑하기보다, 진실을 전달 줄 알아야 합니다.”

권만학: 돈을 벌고자 했다면 기업으로 갔을 것이고, 현실을 직접 바꾸고자 했다면 정치권으로 갔을 것입니다. 학자의 본분은 무엇보다 진실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 첫 시간에 종종 바이러스의 이름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처음부터 ‘나쁜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이면, 연구자는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대상의 성격과 작동 원리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과학 연구자는 자신의 가치와 지향에 매몰되기 쉬운 만큼, 스스로의 선입견을 경계하고 객관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시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그것이 놓인 시대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깊이 파고들되, 개별적인 사실이 더 큰 구조와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구가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동호: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대담을 통해 변화한 한반도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과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연구기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현실에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학술적 성과와 정책적 기여를 조화롭게 이루며 북한·한반도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권만학: 저야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KDI 북한경제리뷰』는 오랜 기간 북한경제와 한반도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며, 학술적 논의와 정책 현장을 연결해 온 중요한 전문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실과 근거에 기초한 연구를 축적하고, 다양한 관점이 책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켜 나가는 일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면을 통해 통일연구원의 역할과 연구 방향, 변화한 한반도 현실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저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연구원과 KDI가 각자의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